

전북자치도, 봄철 대형산불 대비 총력전

‘봄철 대형산불 대비 시·군 대책회의’ 개최
유관기관 공조 구축… 신속대응 시스템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오전 9시 40분, 전북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봄철 대형산불 대비 시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타 시·도에서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전북도는 산불 예방과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14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해 산불 대응 현황과 예방 대책을 공유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4건의 산불이 발생하

여 20.56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지난 25일 고창에서 발생한 산불이 정읍 소성면까지 확산되면서 13개 주먹이 소실되고, 마을 주민 35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산불은 영농 부산물 소각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산불 발생 주요 원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사전 차단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 13일 도내 34개 유관기관과 함께 ‘대형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하여 신속한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시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오전 9시 40분, 전북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봄철 대형산불 대비 시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산불 예방이 최우선이며, 발생 시에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형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 탄소중립 실현위한

‘전북 탄소중립 포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는 27일 오후 2시, ‘소셜캠퍼스 온 전북’ 이벤트홀에서 ‘제14차 전북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전북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행정, 민간,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협력의 장으로, 전북 탄소중립 포럼 위원(위원장 전주대학교 임성진 교수)을 비롯해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탄소중립 지원센터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정책을 공유하고 기술을 교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포럼은 ‘탄소중립 국제협력’을 주제로 정하고, 해외 사례를 도입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이클레이(ICLED)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이 ‘글로벌 기후 정책 동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포럼위원 및 참석자들과 함께 탄소중립 국제협력 방안, 이클레이 가입 및 활동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기존의 수시 개최에서 연 4회(분기별 1회) 정례 개최로 전환하고, 개최 장소도 도청 소재지에서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연 1~2회는 시군 지역에서 개최 계획이다. 또한, 포럼 참여 대상을 시군 관계 공무원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유관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14개 시군 전제로 하고, 행정과 민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도, 전기분야 발전협의회 구성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도내 전기분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전기분야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기산업 발전과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본부,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등 전기 관련 주요 기관들이 참여했다.

도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전기설비 안전점검 확대 △취약계층 전기설비 개선사업 협의 △기간 간 정보교류 및 현장 애로사항 공유 등 다양한 의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는 노후 전기설비 개선과 취약계층을 위한 LED 보급 지원사업 등 전기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노력에 더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식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기안전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주현 전북특별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전기산업 발전과 국민의 전기안전 강화를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연구원, “30분 농촌생활권 도입 시급”

‘30분 농촌생활권구축 선언으로 농촌 이동성(Rural Mobility) 혁신
5만 이상 군지역 인구소멸지수와 연관, 1시군 1철도 역사 건립 타당

지역소멸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농촌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30분 농촌생활권’ 구축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도시는 초고속 철도와 편리한 대중교통망을 갖춘 반면, 농촌은 버스 접근마저 쉽지 않아 의료·교육 등 필수 서비스를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7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농촌은 아직도 필수적인 생활서비스 접근에 상대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부산, 제주, 광주 등 국내 도시들이 ‘15분 도시(Time City)’ 개념을 도입하듯, 농촌에서도 30분 내에 의료, 교육, 문화, 교통 등 필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30분 농촌생활권’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구 청주시의 경우 지난 2023년 ‘청주형 15분 도시’ 청사진을 발표했다.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일상 활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도시에서는 도보나 자전거로, 농촌에서는 대중교통으로 15분 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30분 농촌생활권’은 ‘15분 도시’처럼 n분 이내에 일상생

활에 필요한 직장, 학교, 병원, 공원, 상점 등 제반 시설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농촌을 설계하자는 ‘Rural Mobility(농촌이동성)’ 개념의 새로운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연구원은 “농촌 주민들은 병원을 한 번 가려면 몇 시간씩 버스를 기다려야 하고, 문화생활을 즐기 위해서는 먼 도시로 나가야 하는 실정”으로, 이동을 가속화시키는 한 요인”이라면서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지역 맞춤형 모빌리티 개선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전북연구원은 농촌 거주 65세 이상 노년층 1인 가구가 병·의원을 방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0분이 넘고, 식품사막화가 발생한 지역의 신선식품 구입 이동 시간이 1시간에 달한다는 사례도 들었다.

현재 국내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전체 228개 시군구 중 130곳에 달하며 20~30대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멸 고위험지역은 57곳에 이른다. 특히 전국 소멸위험 지역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자치도로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이며 7곳은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

전북연구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30분 농촌생활권’은 국가가 주도해 도

로, 철도, 대중교통을 포함한 이동생활권을 보장하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이다.

또 생활권 연계를 위한 유기적 도로망 공급을 통해 의료시설과 문화시설 등 지역 내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전북연구원은 선결과제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30분 농촌생활권 구축, DRT(수요응답형 교통) 국가재정 지원, 여객과 물류를 결합한 농촌형 자율주행 상용화, 광역적 접근성을 위한 국가 주도 교통망 지원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전북연구원은 특히 농촌 특성을 고려해 농촌형 자율주행 버스를 상용화시키는 시범지구 지정 등의 정책도 발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 버스 내 집간 마련 등 여객과 물류를 결합시켜 30분 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책임인 김상엽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5만 이상 34개 군을 대상으로 철도역 유무와 인구 소멸지수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철도역 유무에 따라 지방소멸 위험지수의 차이가 나타난다”면서 “5만 이상 군지역에 철도역을 건립하는 것은 광역적 접근이 가능하여 생활인구 유입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국가 차원의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농촌 주민들이 도시와 차별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개발청, 청렴 옴부즈만 신규 위촉

행정·법률 전문가 5명 위촉식·기관장 간담회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27일 새만금청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옴부즈만 5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김경안 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서는 2025년 새만금청의 주요 업무계획과 반부패·청렴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새만금청은 지난 2018년부터 청렴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통해 부패 예방과 공익 신고자 보호에 관한 안내서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설명함으로써 청렴 문화를 향상시키는 변화를 만



들어왔다.

이번에 청렴 옴부즈만은 행정, 법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박성구 위원(전북특별자치도 지적경철위원), 채준호 교수(전북대학교 경영학과), 임병

근 위원(前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 김성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올인), 조숙진 교수(국립군산대학교 특임교수)가 위촉돼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올해 국민과 소통하는 ‘청렴 소통채널’ 운영과 부패 취약 분야를 발굴·개선하며, 조직문화를 발전시키는 반부패·청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청은 청렴 옴부즈만의 활발한 자문과 제안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왔다”며, “앞으로도 청렴 옴부즈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 리더십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만금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전북 청년·대학생위,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 비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 청년위원회(위원장 박경태, 군산시의원)와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이창찬, 전북대 대학원생)가 27일 성명을 내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장녀가 외교부와 국립의료원에 채용된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게 공정이라면 청년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느냐”며

의 투명하고 구체적인 해명, 정부 공공기관 채용 전반 재점검 및 권력형 특혜 채용 방지 위한 제도적 개혁, 심우정 검찰총장 관련 의혹 해명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권력과 기회가 결합한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의 투명하고 구체적인 해명, 정부 공공기관 채용 전반 재점검 및 권력형 특혜 채용 방지 위한 제도적 개혁, 심우정 검찰총장 관련 의혹 해명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권력과 기회가 결합한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AI 디지털 교과서, 학교 자율선택 아니었나”

진형석 도의원 “도내 한 교육지원청서 학교로
2학기 AIDT 채택 독려하는 메시지 발송돼”

교육부가 AI 디지털 교과서 자율선택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북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을 강



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지난 26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이하 ‘AIDT’) 도입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AIDT 학교 활용률을 지역교육청 평가지표가 활용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형석 위원장은 “AIDT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전북의 경우 2월 17일 기준 21%였던 채택률이 3월 14일(전북교육청 보도자료) 기준 36.1%로 한 달 새 15.1%가 늘었다”면서 “도교육청 차원의 채택 독려나 협조요청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은 지속적인 교원 연수 등으로 현장 교사의 관심과 신심이 늘었다면서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IDT 채택 학교의 구독료 전액 지원과 관해서 AIDT가 교육자료로 인정될 경우 교과서 대금으로 편성된 AIDT 구독료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

생할 수 있음에도 지원하는 근거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교과용 도서로 보고 전액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 3월 18일 도내 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각급학교로 전달된 메시지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면서 해당 내용을 밝혔다. 진 위원장에 따르면 메시지는 2학기 AIDT 도입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을 채택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 위원장은 AIDT 도입 절차를 각 학교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공문도 아닌 메시지 쪽지로 전달된 점이 의아스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AIDT 활용 학교 비율이 지원청 평가지표’라는 점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도교육청이 AIDT 도입을 강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형석 위원장은 “AIDT 활용률이 교육지원청 평가지표인 상황에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겠느냐”면서 “교육부 방침대로 각 학교가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부 지침을 공문으로 안내했고, 학교가 AIDT를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평가지표 활용과 관련해 학교에 부담이 있다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이만호 기자

“노인일자리·경로당 주5일 식사제공 확대를”

김정수 도의원, 도정질문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지난 26일 제4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이미 '19년 노인인구 비율이 20.38%에 이르며 전국 평균보다 5년 빨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2024년 기준 노인인구 비율은 25.29%로 전국 평균 20.04%보다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내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더 심각한 실정으로 노인세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각한 빈곤 문제를 겪고 있고 건강악화, 사회적 고립 등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익활동사업은 1:1.3의 경쟁률을, 역량활동사업은 1:2.2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만의 특별한 ‘전북형 역량활동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특별히 노인일자리 사업 미참여 어르신을 위한 소일거리 제공 형식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중 함께 일하던 어르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경우 정서지원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도내에는 현재 6,880곳의 경로당 중 40%에 해당하는 2,807곳이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 추진 2년째가 되도록 대부분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23년부터 올해까지 부식비가 포함된 운영비가 월 16만 원으로 동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경로당 부식비를 인상하고, 급식지원 인력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 노인일자리 지역협의체’를 통해 전북형 역량활동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정서지원과 심리상담을 충분히 지원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로당 식사 제공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시군 및 노인회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해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만호 기자

도보건환경연구원-기상지청, 악취 저감 맞손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전주기상지청은 27일 전주기상지청에서 ‘전북혁신도시 확산 내세 기상영향 예측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상 정보와 악취 배출원 데이터 융합으로 악취 확산 경로를 사전에 예측하여 악취 발생 예상 지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측산악취 관련 자료 제공 및 분석 △서비스 설계 및 기술 적용 △기상 영향 예측 서비스 개발 및 기술 이전 등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해 정기적인 협의회를 운영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전북 혁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측산악취 저감 정책을 지원하고 악취 중점 관리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